

“주민들 명령 겸허히 받아들여 낮은 자세로 임할 것”

선거기간 내내 최대 관심 선거구였던 김제 부안은 국민의당 김종희 당선인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김제부안은 3선의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후보가 버티고 있어 초미의 관심사였다.

김 당선인과 김춘진 후보는 선거기간동안 몇 차례에 걸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도 우열을 가릴수 없는 오차범위 내의 혼전을 거듭했다.

개표 역시 막판까지 엇치라뒤치라해서 후보자들은 물론, 보는 이들의 가슴을 졸이게 했다.

하지만 결국 지역 민심은 관록의 3선으로보다는 정치신인인 김 당선인에게 커다란 기대를 걸고 초선의원이란 배지를 안겨줬다.

사실 김 당선인은 선거전 토론회 불참 선언 등으로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또한 상대 후보의 공약 설명 요구 공격에서 회피하는 듯한 답변을 일관해 일부 유권자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소탈한 이미지로 꾸준히 지지세력을 확보해 왔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진심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마침내 선택 받았다.

지역정가는 이번 승리의 최고 반전 포인트를 바로 김제지역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지 선언 이후부터로 봤다.

더불어민주당 최규성 의원 공천배제에 반발한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김 당선인을 지지했다.

Interview 당선인에게 묻다-〈최종〉김제부안 김 종 회

김제부안 지역구는 선거기간 내내 도내 최대 관심 선거구들 중 하나였다. 지난 13일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김제부안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의원과 국민의당 김종희 후보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혼전이 계속됐었다. 하지만, 꾸준히 지역에서 입지를 다져왔던 정치신인 김종희 후보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당선된 이유가 더민주 경선 불복 김제시의원들의 지지인가?

“승리의 큰 요인들 중 하나지만 진짜 이유는 변화의 중심에 서달라는 시민들의 열망”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은?

“기회의 땅 새만금 발판삼아 지역발전에 최선 복지 등 통해 행복 이끌 새로운 디딤돌 놓을 터”

결국 김 당선인은 선거기간 동안 이들 표를 대거 흡수, 한표라도 아쉬운 상황에서 승기를 잡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쉽지 않은 승리였다.

3선 의원과의 경쟁이다 보니 어려웠다. 나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한다. 유권자들의 과분한 사랑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민주의 경선 불복에 대한 김제 지역 시

의원들의 지지가 컸다고 보나? 그렇다. 승리의 큰 요인 중 하나다. 그분들의 지지가 있었기에 이길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 승리의 가장 큰 이유는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 서달라는 시민여러분의 열망이라고 본다.

▲당선 되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

지역주민들이 가장 먼저 떠 올랐다. 시민여러분들의 명령을 겸허하게 받들어 항상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몸사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선인을 국민의당 후보로 추천한 사람이 유성엽 의원이나 정동영 당선인이라고 하는데 맞나?

권유는 있었다. 추천과는 상관없다. 지역의 이는 분들이라보니 선거에서 많은 도움을 줬을 뿐이다.

▲김제와 부안지역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나?

김제부안은 오랜 농촌지역이다보니 타시도에 비해서 낙후돼 있다. 기회의 땅 새만금을 발판삼아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 복지와 일자리창출을 통해 지역주민행복을 이룰 새로운 디딤돌을 놓는 역할을 할 것이다.

▲선거구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다. 지역주민은 변화를 요구했다. 그 열망으로 당선됐다고 본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김종희를 선택해 주신 표를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한분한분 찾아 뵙고 인사를 올리게 도리지만 모두 찾아 뵙지 못한 점 송구스럽다. <끝> /신광영 기자



도의회 국주영은 의원

법원 1일 명예민원실장 체임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의(전주9)은 27일 전주지방법원장 1일 명예민원실장에 위촉돼 별관 종합민원실에서 명예민원실장으로 근무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민원이 가장 많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법원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상담과 안내를 하는 등 명예민원실장으로 역할을 수행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법원의 민원 업무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법원 사무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도민의 눈높이에서 민원행정의 문제점과 개선책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새누리당과 연정은 제2의 3당합당”

국민의당 차기 원내대표로 추대된 박지원 의원은 27일 최근 불거진 연립정부론과 관련, “(새누리당과의 연정은) 제2의 3당 합당이고 중도통합론과 같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제1A 시사교양프로그램 ‘직인직설’에 출연, “호남의 발전을 위한 호남 참여 연정을 말한 게 최근 새누리당과 연정할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가) 발전됐다”며 “(연정을 한다면) 우리는 최소한 우리끼리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약 새누리당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온다면 얼마든지 개방해서 받쳐주는 취지였다”라고 설명한 뒤 “그 예로 DPP(김대중·김종필) 연합이 있는데, 그래도 D는 J와 되지 않았다. J가 D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취지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가야지, 경제·복지·대북정책이 완전히 다른 새누리당과 연정하는 건 집토끼를 놓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여소야대 정국... 박 대통령 레임덕 가시화되나?

국정교과서 폐기 등 우려

김영란법 재검토 요청에

야권은 고개 돌리는 등

정책 추진 동력 낮아지고 있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폐기 결의안에 대해 우려하고, 김영란법 국회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야권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여권의 정책 추진 동력이 사라지면서 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시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내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야당이 국정교과서 폐기 결의안을 준비 중인 것과 관련, “학생들에게 (기존 교과서로) 가르쳐야 되느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여태까지의 교과서

를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념 편향성여부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며 “청소년들이 어떤 역사 교육을 받고 자라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되느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내수 위축을 이유로 들며 우려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실제 그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며 “위헌이나 아니냐를 떠나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게 내수까지 위축시키면 어떻게 하느냐”며 “이 부분은 현재에서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야겠지만 국회 차원에서 한번 다시 검토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바깥과는 달리 두 야당은 고개를 돌리고 있다. 원내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모두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외면하고 있다. 나아가 두 야당은 ‘국정교

과서 폐기 결의안’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간담회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추진한 일에 대해 전혀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라며 “논쟁할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 26일 기자들을 만나 박 대통령이 김영란법에 대해 우려한 것과 관련, “올바른 접근 방법이 아니다”라며 “내수와 연결시키기보다 오히려 원칙적 부분에 대해 말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박 대통령을 겨냥, “고집만 세고...”라고 말하기도 했다.

더민주 이재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한·일 위안부 합의, 개성공단 폐쇄 등에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을 뿐”이라며 “불평의 리더십을 고수하겠다는 대통령의 고집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성주 기자

“옥정호 시군상생협력 조례안은 지역이기주의의 극치”

임실수역상생협, “정읍과의 사전협의 없이 지역 권한 제한” 반발

임실군옥정호수역상생협의회(위원장 김중현)는 기자회견을 통해 장항수 도의원(정읍)이 발의한 전북도 옥정호 수역 시군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는 지역이기주의의 극치이며 정읍 도원천을 보호 구역에서 제척해놓고 수질문제를 임실군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지역이기주의의 일방적인 처사에 반발,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지난 2월 입법 예고된 전북도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임실군과 정읍시의 사전협의를 생략되지 않으면 전북도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을 골자로 임실군의 지방자치권을 제한할 것 이라는 행정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협의회측은 옥정호 수면이용 및 수변개발 행위에 관해 전북도, 정읍, 순창, 임실의 합의 도출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전북도 투자 심사에서 3개 시군의 의견 수렴을 의무로 규정해 지난 2015년 전북도와 임실군, 정읍시, 순창군이 체결한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선언서 내용중 상호간의 유기적 협의를 한다는 내용을 전북도 조례로 제정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전북도예산을 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임실군의 자치권을 제한하는 부

당한 처사라며 임실군 발전을 위한 개발 행위에 있어 전북도예산을 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역편중의 극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완수 도의원(임실)은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임실군이 갈망하는 권익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행정조치였다. 그동안 임실군민의 권익보호가 크게 훼손되었음은 물론 경제적 손실 또한 막대했음이 입증돼 시장 군수간 상생협력에 대하여 노력하지는 의견 교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 단계간 불협화음을 초래하는 돌발성 발의는 용인할 수 없다. 임실군은 최상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군민들의 수준 높은 의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정읍시는 상수원 관리 지역내에 병원 적축 물을 방치하고 있는 등 수질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기에 정읍시는 도원천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앞장서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측은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을 무시하는 지역편중의 이기주의의 극치라며 임실군민의 생존권을 보호할 방침 이라고 전해 향후 법적대응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임실=진중영 기자

“위안부 합의 수용 불가능”

더민주, 기존 입장 고수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지난해 말 한·일 양국이 타결한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합의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당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더민주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은 지난해 12월28일 한·일 위무장관이 합의한 위안부 합의 내용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전날 벵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를 했지만 이행이 제대로 안됐다. 이행속도가 빨라야 한다”고 발언, 논란을 빚었다. 이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변인은 “어제 김 대표의 그 언급은 이른바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려운 합의란 것을 해놓고도, 그런 합의 내용조차도 일본 내에서 부정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는 불역사적, 또 부적절한 인식과 자세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성주 기자

더민주, 내달 3일 전당대회 개최시기 논의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의 운명이 기로에 섰다.

더민주는 다음달 3일 당선인·당무위원회 연석회의를 갖고 전당대회 개최시기를 논의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종료될 지, 연말까지 이어질 지가 이날 결정되는 것이다.

정장선 총무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전대 시기문제를 충분히 논의했다”며 “내부에 전대를 조기에 하지는 의견과 연기하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시기를) 결정할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소한 당무위원회와 당선인들이 같이 모여서 전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며 “의견이 모아지면 추후 당무위를 열어 최종 의결하는 방식을 밝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민주는 연석회의 전에 권역별로 시도당위원장, 종진의원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김종인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신진세력들은 당초 ‘김종인 대표 합의추대’를 희망했지만 문재인 전 대표와 친노 등을 중심으로 합의추대발가론이 힘을 얻으면서 차선으로 ‘전당대회 연기’를 추진해왔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연말까지 유지하며, 당의 체질을 개선하고 수권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전당대회 연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당내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김종인 대표와 가까운 신진세력을 비롯해 이종걸 원내대표와 노웅래 의원, 김진표 당선인 등을 비롯해 일부가 전대연기론에 힘을 실고 있지만 대표추대론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김종인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신진세력에 대한 당내 반발이 커진 것이 문제다.

홍영표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 “당내에는 총선 후 전대를 통해 새 지도자가 탄생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여러 핑계를 대면서 (비대위 체제를) 연장하면 또 다른 갈등과 분란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성주 기자

국민의당 당선인들, 당 정체성 놓고 입장차

국민의당 당선인들이 ‘중도냐, 선명한 야당이나’라는 당의 정체성 문제를 놓고 당 내 입장차를 명확히 드러냈다.

27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 양평에서 열린 국민 의당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한 박지원 의원은 이날 “국민이 야당이라고 만들어 준 만큼 야당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주 당선인도 “호남을 기반으로 한 야당이 복원해야 한다는 고민 하에 제가 국민의당을 선택했고 그것을 기초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며 야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반면 이상돈 당선인은 “20대 국회가 경제위기 문제에 정부여당을 단순 비판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점인 특정 이념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점을 살려야 한다”며 “비판 뿐 아니라 대안을 내고 정부 여당을 걱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16년 만의 여소야대 국회, 20년만의 3당 체제가 됐는데 우리가 단합하고 소통하고 정책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춰 국민들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며 “그래야만 국민의당 중심으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